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일시

2025. 8. 7.(목)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서왕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포럼, 소셜벤처코리아

식 순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		
14:05-14:15	개회	환영사	김현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서왕진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14:15-14:20	단체사진 촬영		
14:20-14:35	발제	발제 1	소셜벤처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안지훈 소셜벤처코리아 대표
14:35-14:50		발제 2	소셜임팩트 투자 현황 및 개선 방안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14:50-15:15	지정토론	토론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15:15-15:40	자유토론	검토의견 종합논의	윤훈섭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제너럴 파트너 한성근 아크임팩트자산운용 대표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기타 참석자
15:40-15:45	폐회		

환영사

현장축사



김현대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현장축사



최혁진 국회의원

서면축사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윤만을 좇는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투자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흐름을 넘어, 불평등·기후위기·청년실업·돌봄 공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자본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셜벤처 육성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셜벤처의 개념조차 생소했고, 정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셜벤처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소셜벤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을 신설했고 이후 5년간 꾸준한 지원으로 생태계를 키워왔습니다. 2021년에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연속성을 잃고 통폐합되었으며, 생태계는 방향을 잃은 채 혼란의 연속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셜임팩트 투자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기준과 측정체계도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 자본이 공공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인센티브가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셜벤처 예산 반영 및 지원 추진을 공약하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금부터가 정책복원을 통한 소셜벤처의 재도약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셜임팩트 투자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제도의 정비와 예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7일

국회의원 서왕진

발제

소셜벤처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안지훈 대표

소셜벤처코리아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소셜벤처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셜벤처코리아
대표 안지훈



소셜벤처의 어제와 오늘

소셜벤처코리아

소셜벤처 현황

소셜벤처 수



2,679개

마을기업 수



1,726개

사회적기업 수



3,762개

벤처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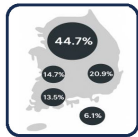
40,081개

중소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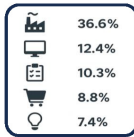
804만 여개

수도권 집중



44.7%

업종별 분포



제조업 36.6%

기업 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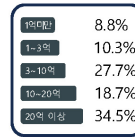
8.7년

사회적기업인증



인증 75.3%

매출규모



20억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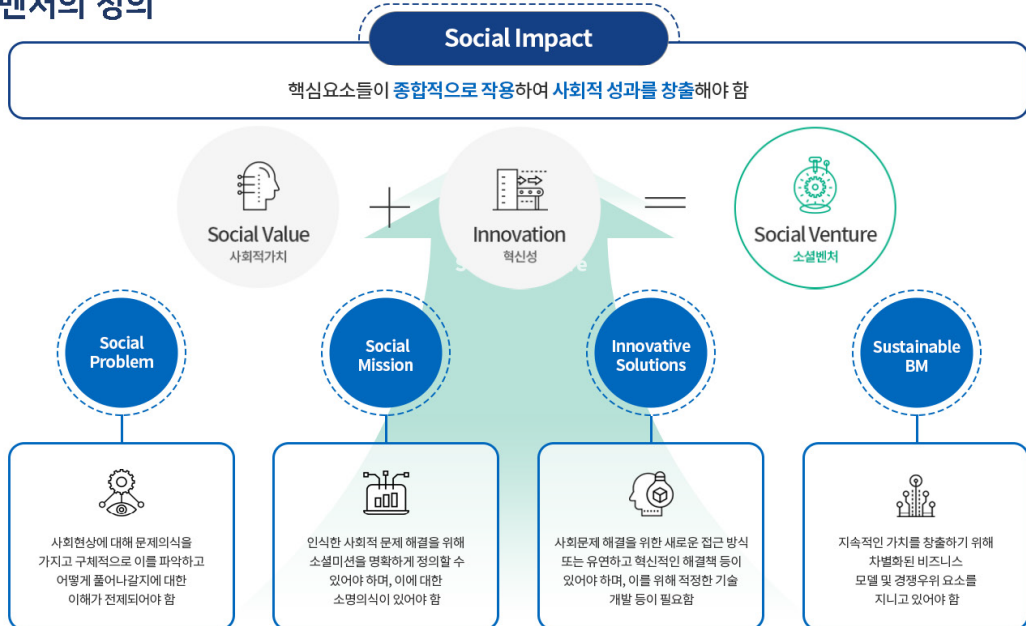
* 2023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정의



* 소셜벤처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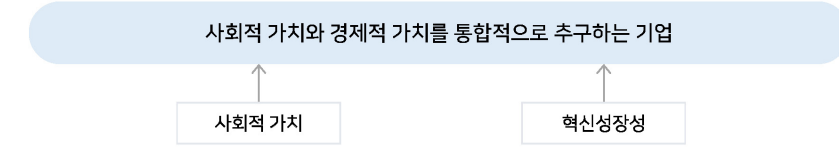
소셜벤처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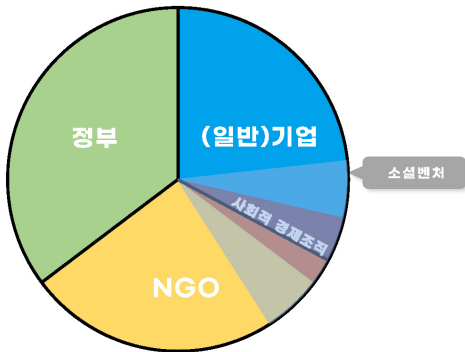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의 법적 정의와 재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소셜벤처 정의



소셜벤처의 재정의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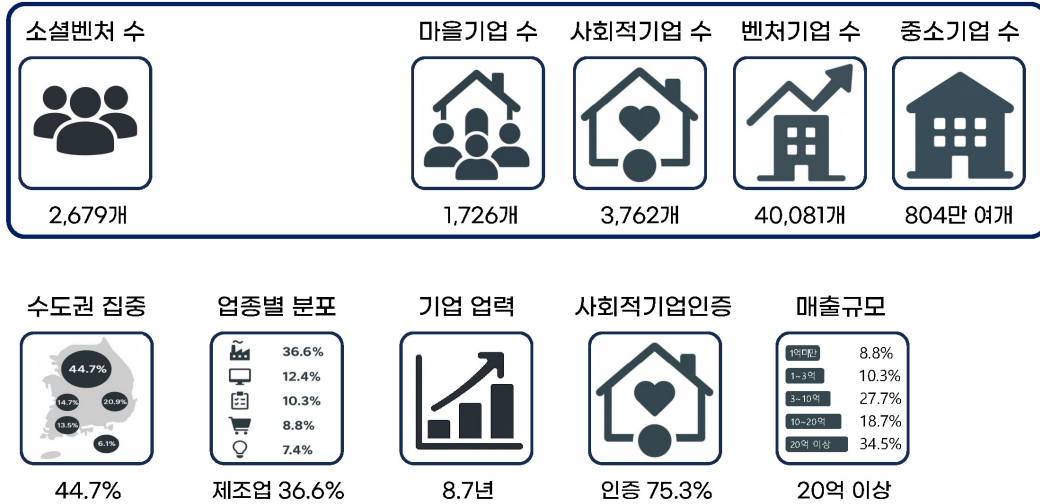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 즉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인권의 보호,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공헌, 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재정지원에 의한 소셜벤처 현황



* 2023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확장과 집중



소셜벤처의 확장



지역화와 할당지원을 통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

전국 읍면동 소셜벤처 확산 프로젝트

생애주기 단계별 소셜벤처 할당지원제

사회적 가치 환산 및 사회적 금융 통합 시스템 구축

소셜벤처의 확장



지역화와 할당지원을 통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

전국 읍면동 소셜벤처 확산 프로젝트 (예) 마을기업

개요 지역문제 기반 창업공모제, 읍면동 창업거점 조성, 기초자치단체 연계 협력 플랫폼 구축

내용 전국 3,400여 읍면동 생활의제 공모 → 문제 해결형 소셜벤처 발굴

읍면동 공공 유휴공간과 지역대학을 통합한 창업 인큐베이터 지정

지역 주민·기관 연계형 '로컬 미션 매칭 플랫폼' 운영

예산 연 500억 원 (시범사업 500개 읍면동 기준: 1억원 X 500 소셜벤처)

효과 소셜벤처 양적확대 및 안정적 기반 마련

전국 읍면동 단위 사회문제 완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촉진 및 자립형 지역경제 기반 마련

소셜벤처의 확장



지역화와 할당지원을 통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

생애주기 단계별 소셜벤처 할당지원제

개요	저성장·중성장 단계에서 일정 쿼터의 자원과 기회 보장, 초기 진입장벽 대폭 완화
내용	소셜벤처 성숙도 3단계 구분→성숙도 진단 →예산 및 사업별 할당 조율 →집행 소셜벤처 지원사업 예산의 최소 40% 이상을 저·중성장 기업에 쿼터 배정
예산	기존 소셜벤처 지원사업 예산 배분 기준 개편으로 예산 집행
효과	소수 상위기업 쏠림 방지, 지원 사각지대 완화 저성장 기업의 생존률 및 전환률(중성장 이동) 증가로 경제적 안전 도모 생태계 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 형성

소셜벤처의 확장



지역화와 할당지원을 통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

사회적 가치 환산 및 사회적 금융 통합 시스템 구축

개요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화폐화해 제도적으로 보상, 민간 및 공공 금융과 연계
내용	SROI 기반 '사회적 가치 환산지표(SVI-Korea)' 개발 및 제도화 사회적 가치 연계 공공보증제(SV-backed Loan), 지역임팩트펀드, SIB 등 금융도구 운영
예산	제도 개발 및 운영비 연 100억 모태펀드와 연동한 소셜벤처 쿼터 편성을 통한 예산 집행
효과	경제적 수익 다양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성장 촉진 성과기반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경제의 신뢰성 향상 공공을 넘어 민간 임팩트 투자 시장 촉진 및 활성화

소셜벤처의 확장



괄목할 만한 혁신속진 선도형 소셜벤처 육성

자본 및 투자 전략: 민간투자자와 공공 자본 매칭, 정책금융 특별한도 제공

제도연계: 공공조달 우대 및 ESG평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경영 지원

시장 확대: 대기업/공공부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소셜벤처의 확장



괄목할 만한 혁신속진 선도형 소셜벤처 육성

자본 및 투자 전략

민간 임팩트 투자 유치 연계

국내외 임팩트 투자기관, ESG 펀드, 벤처캐피탈 등과 투자 매칭

투자 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운영

공공 자본 매칭

정부 보조금, R&D 자금, 사회적 가치 연계 보증을 민간 투자와 패키지화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투자유치 시 공공자본 자동 매칭

정책금융 특별한도 제공

기보, 신보, 산업은행 등에서 성장단계 소셜벤처 전용 금융상품 신설

이자감면, 우대한도, ESG인증 연계 혜택 포함

소셜벤처의 확장



팔목할 만한 혁신촉진 선도형 소셜벤처 육성

제도 연계

공공조달 우대제도

고성장 소셜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조달청 우선구매 대상 등록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대상 '사회적 가치 연계 구매 가이드라인' 적용

ESG경영 평가 및 연계 컨설팅

ESG 초입 단계 기업을 위한 자가진단 → 공공 ESG 평가모형 제공

ESG 경영보고서 발간 컨설팅(지속가능보고서, IR 자료 포함)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원

GRI·K-ESG 등 기준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신뢰도 향상 지원

소셜벤처의 확장



팔목할 만한 혁신촉진 선도형 소셜벤처 육성

시장 확대 전략

공공부문 B2G 연계

공공과 협약을 맺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공공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연계

대규모 사회문제 해결 미션과제 수주형 사업으로 확장

대기업 B2B 파트너십 매칭

ESG 실천 대기업과 연계한 소셜벤처 제품/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공급망연계, 공동브랜드, 유통망입점 등 체계적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KOICA, KOTRA, UNDP, 등과 연계해 해외 실증(PoC) 및 시장진입 지원

소셜벤처의 확장과 집중을 위한 관련법 제정



소셜벤처의 양적 확대와 선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 지역화와 할당지원을 통한 비약적인 양적 확대
- 괄목할 만한 혁신촉진 선도형 소셜벤처 육성

지방정부 협력 및 지역 단위 할당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소셜벤처 법적 정의 및 성장단계 분류의 법제화 필요

부처 간 통합 예산·제도 연계를 위한 법률 기반 필요

임팩트 측정·보상 및 성장 인센티브 체계의 제도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소셜벤처 현황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셜벤처코리아



발제

소셜임팩트 투자 현황 및 개선 방안

장지연 사무총장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소셜임팩트 투자 현황 및 개선 방향

- 장지연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 관련 현황

□ 소셜벤처는 2021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22년 이후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

- 소셜벤처 판별기업 수 연간 성장률 ('20년) 51.2% → ('21년) 44.7% → ('22년) 12.1% → ('23년) 9.4%

[표] 소셜벤처 판별기업 및 매출/근로자수 연도별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셜벤처 판별기업 (개)	998	1,509	2,184	2,448	2,679
평균매출 (전년도, 백만원)	1,659	2,260	2,895	2,798	3,075
평균 상시근로자 (명)	11.6	16.1	22.8	21.6	20.8

* 연도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2020년 ~ 2023년)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중단으로 인해 ‘소셜임팩트 펀드’ 결성 둔화

- 2018~2020년 중기부는 모태펀드에 ‘소셜임팩트’ 분야를 신설해 소셜벤처 투자를 촉진하였으나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됨
 - 2024년 말 정책성 자금이 투입된 임팩트 펀드 총 결성액은 7,780억 원
 - * 정부 출자 비중 57.5%, 승수효과 1.7배
 - 정부의 소셜임팩트 출자사업 '21 ~ '23년 중단, '24년 200억 원 출자

[표] 정책성 임팩트펀드 결성 추이 (2023~2024년)

(단위: 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 ('23 → '24년)	
	모펀드 누적 출자액	자펀드 누적 결성액	모펀드 누적 출자액	자펀드 누적 결성액	모펀드 출자 증가액	자펀드 결성 증가액
한국벤처투자	2,635	3,786	2,835	4,166	200	380
· 사회적기업	255	376	255	386	-	10
· 소셜임팩트	1,880	2,785	2,080	3,155	200	370
· 도시재생	500	625	500	625	-	-
한국성장금융	1,640	3,613	1,640	3,614	-	-
합 계	4,275	7,399	4,475	7,780	200	380

* 사회적금융 협의회 회의 자료 (금융위원회, 2024.1월, 2025.1월)

□ 2018년 이후 결성이 본격화된 임팩트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적합한 Exit 수단 부족으로 소셜벤처의 미션 이탈 위험 및 자금 선순환 차질 우려

-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벤처육성 제도를 기반으로 소셜벤처 투자/육성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모델과 경영논리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셜벤처는 사회적·환경적 성과 창출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 유동성 부족 심화

[표] 임팩트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펀드 운용기관 현황

구분	해당 조직	법적 근거
엑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주)임팩트스퀘어, (주)엠와이소셜컴퍼니 (주)소풍커넥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벤처투자법
벤처투자회사	(주)D3주빌리파트너스, (주)인비저닝파트너스 (주)HG이니셔티브, (주)소풍벤처스	벤처투자법
자산운용사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 (주)크레비스파트너스 (주)인비저닝파트너스	자본시장법

□ ‘소셜임팩트 펀드’와 일반 벤처펀드 간 제도적 경계가 흐려, 소셜 임팩트 펀드의 정당성 및 정책 효과성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소셜임팩트 펀드는 현재 일반 벤처투자시장에서 투자자 개발 및 자금 회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일반 벤처시장 논리로 흡수될 위험이 존재
 - 소셜벤처 전문가들은 국내의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 중 실제 미션 중심 조직에 투입된 자금은 15% 수준으로 진단
- 임팩트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중개기관이 투자자/기업과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적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투자 및 기업운영 과정에서 사회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및 규범의 정착을 위해 규제적 접근이 필요

☞ 소셜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셜 임팩트 펀드’가 일반 벤처펀드로 동형화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ex. 한국거래소의 ESG 채권 발행 및 공시 체계 참고 <https://esgbond.krx.co.kr/>

2. 개선 방안 -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활성화 방안

가. 벤처투자조합 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 별도 관리

- 벤처투자조합 중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으로 별도 등록 및 관리
- (가칭)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등록 요건 (안)
 -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 및 관리 체계 보유,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
 - 결성액의 50% 이상을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 의무
 - 사회적가치 평가/관리 현황 공시 의무 부과
-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 마련 (규제 개선)
 - 혼합가치 추구로 성장이 더딘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 업력 기준 완화 적용
 - * 초기기업 3년 → 5년, 창업기업 7년 → 10년
 - 신주와 구주를 함께 취득하는 블렌디드 구조 허용
 - 소셜벤처 지위를 가진 협동조합에 대해 출자 허용 (우선출자제 활용)
- ☞ 협동조합은 Community Exit 방식으로 자금 회수 가능 (CBO, Community Buyout)
지역사회에서 신뢰 형성 후 조합원 출자/차입 등을 통해 서서히 회수
- 시행 방안: 시범 사업을 통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별도 등록 및 관리 체계 가동, 이후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법제화
 - (시범 사업) 모태펀드 내 소셜임팩트 계정 예산을 할당해 공급하면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적극적인 해석과 지침을 통해 진행
 - (법령 개정)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필요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유형 신설

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소셜임팩트’ 분야 부활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결성 지원
 - 임팩트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펀드 결성은 앵커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로 기 결성된 펀드들이 회수 단계로 넘어가서,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 고려 (하반기 예산 편성 검토 요청)
- 연간 1천억 원씩 5년간 출자 (누적 5천억 원 규모)
 - 약 8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비율 60% 기준)

다. 정부가 주도하여 ‘소셜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 IPO,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소셜벤처의 특징을 고려해,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활용해 소셜벤처 전용 세컨더리 펀드 결성
- 이를 통해 기 결성된 소셜임팩트 펀드의 구주를 매입하고, 민간 투자자 자금 선순환을 지원
- LP, GP에 조기 현금화 경로를 제공하여 임팩트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사회적 가치 검증이 끝난 후기 포트폴리오만 인수해 리스크·변동성 최소화

[붙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향 및 과제

1. 관련 현황

가. 시장 규모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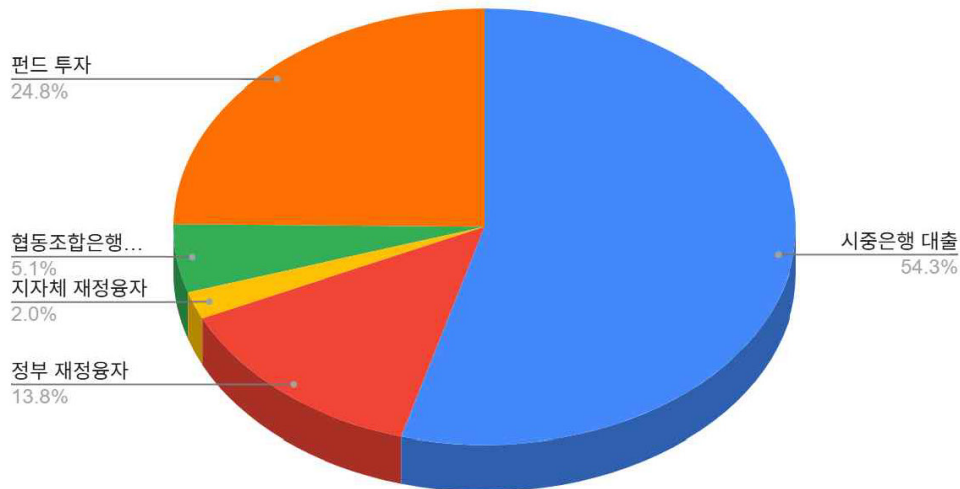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공급액은 약 3.4조 원으로 추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투융자 자산 규모 (대출잔액, 펀드 결성액 등 운용자산 규모 기준)

[표] 2024년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규모 추정

구분	금액	비고
시중은행 대출	17,030	시중은행 사회적경제 보증부 대출 잔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연계)
정부 재정융자	4,3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잔액 추정치 (5년 공급액 누계의 70%)
지자체 재정융자	640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미회수채권
협동조합은행 대출	1,590	신협,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 대출 잔액 추정치 (5년 공급액 누계의 70%)
펀드 투자	7,780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계정 및 성장금융 사회투자계정 자펀드 결성액
계	31,360	

- *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 및 지자체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 * 직접 합산액 약 3.1조 원이지만, 미집계 영역을 고려해 추정치는 10% 상향
 - 미집계 영역: 타 정책자금 연계 펀드(환경, 지역, 사회서비스, 농식품, 국제개발 등), 순수 민간펀드, 공익법인/자조기금 직접 투융자 등
- * 시중은행의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잔액 중 담보대출/신용대출 1조 원을 제외하면 2.4조 원



나. 지난 정책 회고

□ 개요 및 성과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2018~2021)

- 정부는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몇 가지 정책 프로그램 가동
⇒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공급 확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자금 공급 확대 요인
 - ① 정부 보증을 통한 시중은행 접근성 제고 -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100% 특례 보증
 - ② 중기·소상공인 재정 용자 접근성 제고 - 중진공, 소진공 용자 예산 일부 할당
 - ③ 모태펀드 출자로 소셜 벤처투자촉진 -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앵커 투자
 - ④ 서민금융기관 비영리 조직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예산 증액
 - ⑤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 가동 - 금융위원회 주관 ‘사회적금융 협의회’ 분기 단위 개최
- 정책 효과의 원인
 - **(기술적 측면)**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인프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가동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각각 2012년, 2014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자 지위 보유
 - 기재부/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정책금융 가동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및 인프라 개선 추진, 회의체를 구성해 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 **(정책기조 측면)** “사회적 가치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정책 기조와 연결
 - 세월호 사고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마저 재무적 가치에 경도된 현실을 타개하려는 접근으로 추진

□ 평가 -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

- 2018년 초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발표 당시 정부는 한국의 사회적 금융이 “정부·공공 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 중”이라고 진단하며, ① 사회적 금융 시장조성과 ②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 2021년 말, 금융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추진 내역을 평가하며,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사회적 금융 공급액이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 위주로 이루어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 * 금융위원회, 「ESG 경영·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21. 12. 8
- 활성화 정책은 자금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었으나, 중개기관 육성이나 민간 투자자 개발 등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미해 ’18년 계획수립 당시 정부가 진단한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음
- 그러나 사회적 금융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금융지원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고,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

□ 한계 - 자금공급 사각지대

- 한계
 - 중소·벤처기업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들은 자금공급 사각지대에 남겨 짐
⇒협동조합, 인증 사회적기업(배당 가능 이익의 1/3 한도 안에서 배당) 투자 기피
 - 자금공급이 용이한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을 “소셜벤처”로 새롭게 제도화
⇒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유망 사업단위 분리 주식회사 설립 추진
- 자금공급 사각지대
 - 협동조합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성장에 투자하는 **육성 자금**
 - 검증된 모델의 보급·확산, 연합회 중심 규모화 추구하는 지역기반 조직 **성장 자금**
 - 사회주택, 시민발전 등 임팩트 프로젝트 중심 사업 조직의 **프로젝트 자금**
-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육성 자금, 성장 자금, 프로젝트 자금 부족**
- ☞ **정책 변동성을 흡수할 민간 투자자 및 중개기관 육성, 자금의 지역 선순환 구조 형성 관점 부족**

2. 추진 방향

가. 고려 사항

□ 자금 수요 측면

- 충족되지 않은 양질의 자금 수요 확인 - 사례 창출, 역량 보유 분야
 - **임팩트 프로젝트 투자:** 사회주택 건립, 시민발전 설치, 돌봄 공간/시설 확충 등
 - **폴뿌리 지역사회 투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밀착기업 육성, 지역순환경제 촉진
- 사회적경제 원리로 재구성 가능한 경제 영역 확대 - 성장 기회 존재 분야
 - **거시 환경 변화:** (국내)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돌봄 사회화, 일자리 위기, 지방 소멸 등 경제/사회 변화 가속화; (글로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경제 기반으로 이행 완만히 지속 (EU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의무)
 - **새 정부 국정 기조:**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 삶 보장하는 ‘기본사회’ 추구
 - 성장과 복지 동시 추구, 균형발전 추구, 폴뿌리 민주주의 구현
 - 주거, 건강, 소득보장; 지역 의료, 사회적 주택, 친환경 에너지 분야 육성 방향
- (수요 측면) 충족되지 않은 양질의 자금 수요 및 사례 존재, 역량 보유 분야

□ 자금 공급 측면

- 글로벌 임팩트 투자 시장의 형성 ⇒ 호환성 확보 필요
 - 전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571조 달러 규모 (약 2,200조 원)
 - 투자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금 규모(AUM, Assets Under Management)를 시장 규모 대용치로 사용
 -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GIIN에서 정한 임팩트 투자 정의에 부합하는 투자 범위에서 집계 (재정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
 - 투자자산 운용사(펀드 운용사), 연금, 보험사, 은행, 개발금융기관, 재단 등이 참여 - 특히, 연금, 보험,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참여 기관 수 대비 자산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
- ☞ 임팩트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핵심 플레이어(투자자, 중개기관, 인프라)육성과 함께 주류 금융기관의 참여 촉진 병행이 중요

글로벌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

○ 전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571조 달러 규모 (2024년 약 2,200조 원)

- 2022년 1.164조 달러에서 연평균 16.2%씩 성장

* GIIN (2024), Sizing the Impact Investing Market 2024.

○ 영국의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23년 768억 파운드 규모 (2023년 약 142조 원)

- 2020년 576억 파운드에서 연평균 10.1%씩 성장

* impact investing institute (2024), The UK impact investing market: Size, scope, and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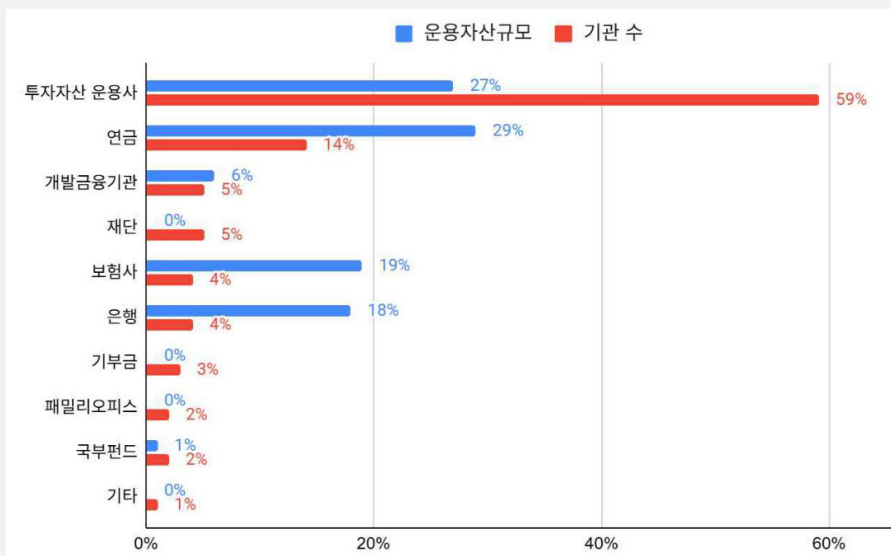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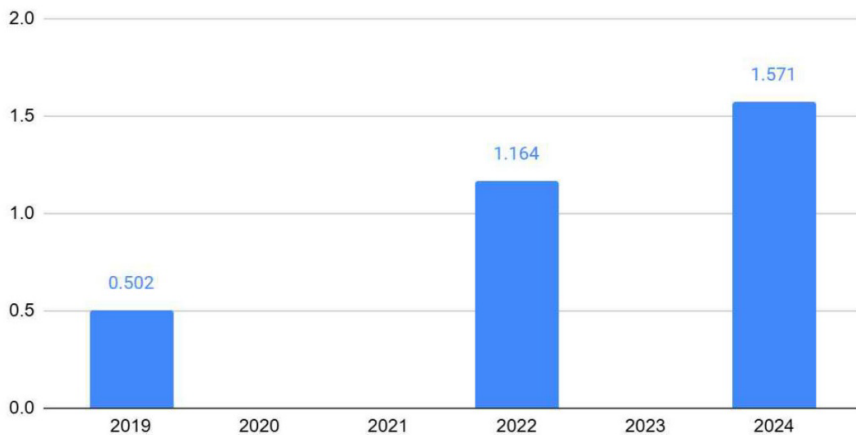
○ 일본의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24년 15.7조 엔 규모 (2024년 약 150조 원)

- 2023년 11.5조 엔에서 연간 35.7% 성장; 2024년 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의 6.8%

* GSG Impact Japan NP & SIIF(2024),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Impact Investing in Japan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 규모 (GIIN, 2024)

(단위: 조 달러)



나. 향후 추진 방향 (제언)

□ 방향 1. ‘금융 접근성 제고’ 에서 ‘임팩트 규모화’ 로

- 1기 활성화 정책(2018~2021) 성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제고” 로 나타났고, 이 효과는 활성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기 정책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임팩트 규모화” 를 추동하는 사회투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추진 방향	1기. “금융 접근성 제고”	➡ 2기. “임팩트 규모화”
공급 목적	진입 지원, 운영 안정화	성장 지원, 임팩트 창출
자금 수요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성장 자금, 프로젝트 자금
공급 방식	용자 중심	용자 + 투자 중심
선별 기준	기업의 요건	창출되는 임팩트
제공 가치	자금의 양	양적 확충 + 자금의 성질

□ 방향 2. “자금 공급” 에서 “시스템 구축” 으로

- 정책 목표를 투자자 개발, 중개기관 육성, 양질의 수요 개발, 인프라 조성 등 “시스템 구축(생태계 조성)” 에 두고 추진

구분	1기. “자금 공급”	➡ 2기. “시스템 구축”
투자자	중앙정부 중심	+ <u>민간 투자자 개발</u> · 공익법인 사회투자 지원 · 금융기관 참여 촉진 (위험 관리) · 지자체 기금 활용 개선 · 시민투자/자조기금융성
중개기관	중기/소상공인 인프라 가동 -공공기관 지역전달체계 -금융기관 정책협력	+ <u>중개기관 다양화 및 협력 구조 마련</u> · 팩트 전문 민간 중개기관 육성 · 성장 단계별, 임팩트/리스크 스펙트럼별 역할 분담 · 프로젝트 펀딩 중간사 육성
수요	사회적경제 기업 중심	+ <u>사회문제해결 기업, 임팩트 프로젝트</u> · 양질의 수요 개발 (건설팅, 연합회 통한 전략모델 확산 지원) · 현장 조직 재무역량 강화
인프라	자격 요건 판별 인프라 구축	+ <u>임팩트 평가/관리 체계(IMM) 도입/활용 관행 정착</u> + <u>리스크 관리 체계보강</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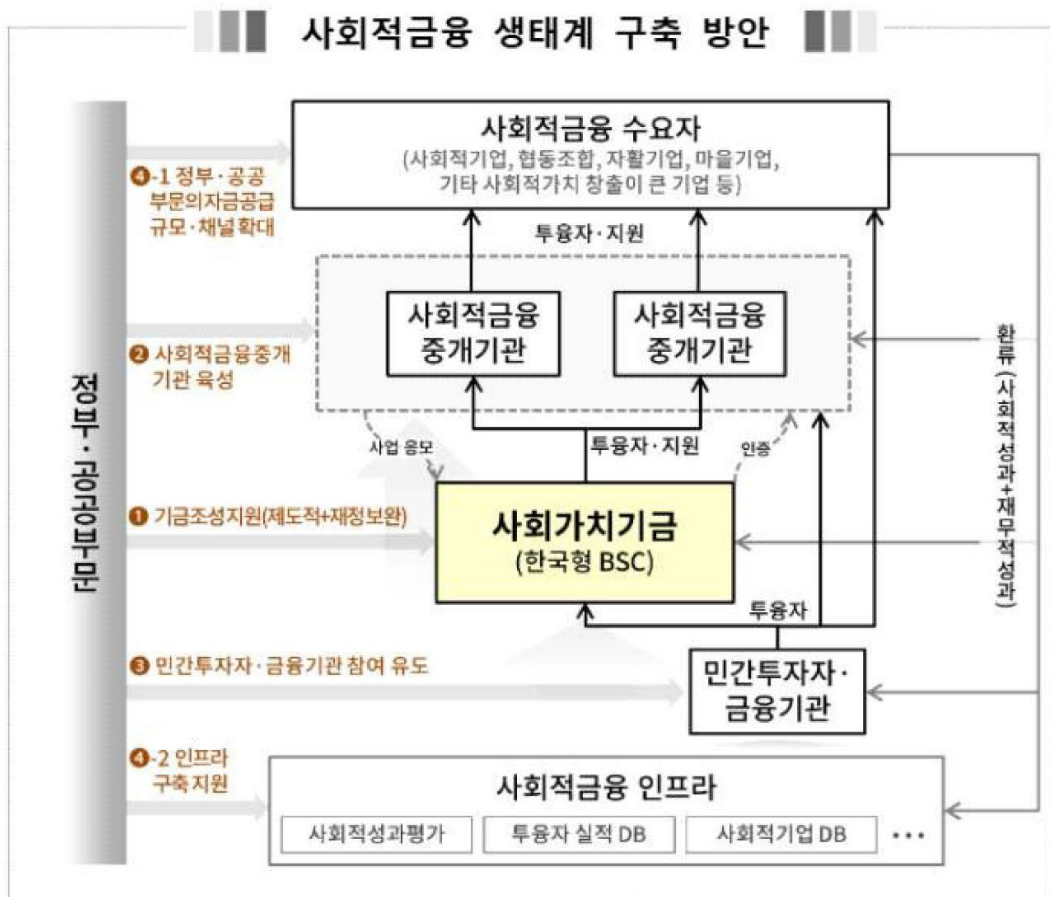
사회적 금융 시스템



인프라 조성

평가/보고 체계, 정보 DB, 리스크 관리 체계 등

[그림] 사회적 금융 시스템 (생태계)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9대 과제

추진 전략

- I.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재원 확충
- II.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 III.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

#재원확충 #중개기관육성 #연대금융활성화

전략 I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 개발 및 재원 확충

- 과제 1. 민관 협력 사회투자 도매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 공급
- 과제 2.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으로 공익법인 사회투자 참여 지원
- 과제 3.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및 자금공급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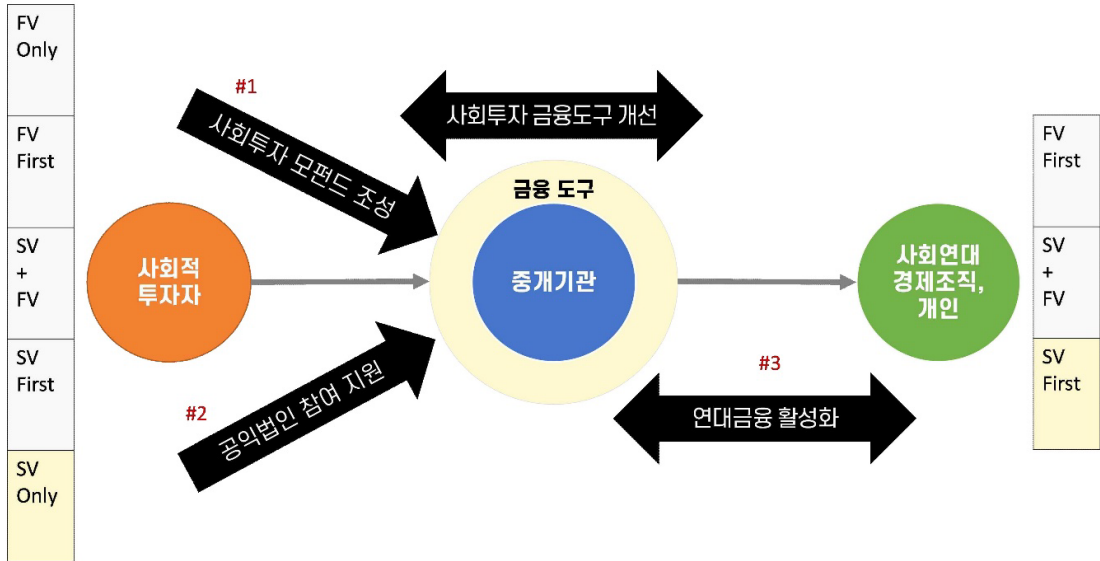
전략 II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 개발 및 중개기관 육성

- 과제 4. 소셜임팩트투자조합 신설 및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 과제 5.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근거법 제정 및 지방정부 시행 지원
- 과제 6.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전략 III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금융 활성화

- 과제 7. 지역, 업종, 분야별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원
- 과제 8. 신탁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허용
- 과제 9. 사회투자 시민참여 활성화 목적의 세제혜택 제공

3. 개선 방안 (제언 사항)



* FV(Financial Value, 재무 가치), SV(Social Value, 사회 가치)

가. 사회투자 모펀드 조성

○ 민관 협력 마중물 펀드 조성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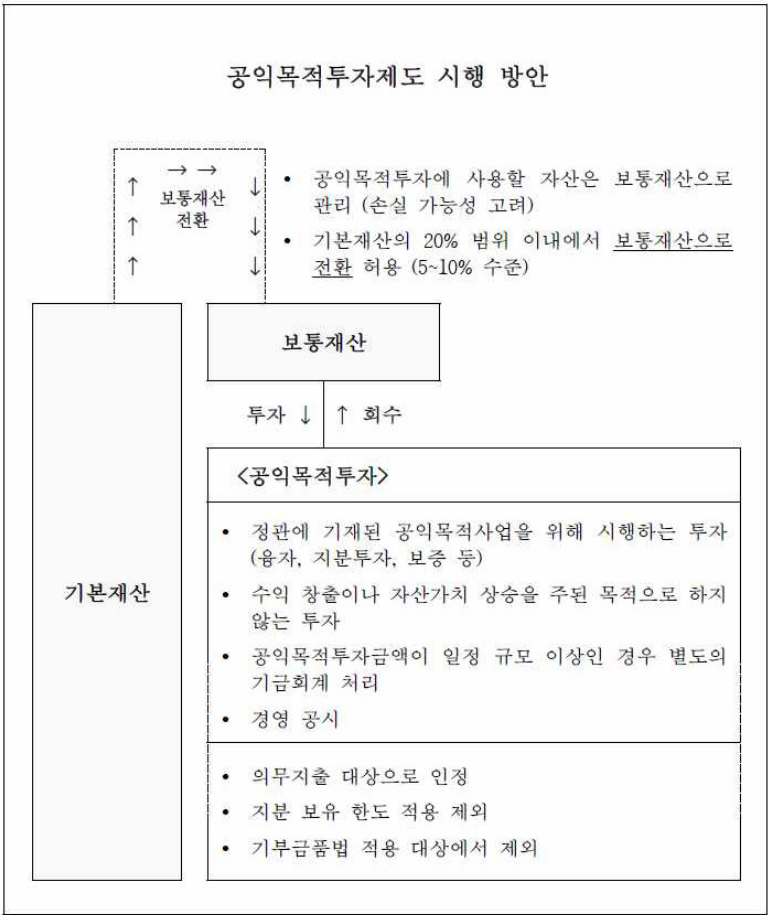
- 사회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된 민간 사회가치기금에 정부가 매칭 출자하여 마중물 펀드 조성
- 사회가치평가 및 사각지대 대응 가능한 사회투자 모펀드 전문 운용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마중물 펀드 운용 위탁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휴면예금 등 공공기금 출자로 중앙에서 공급하는 마중물 펀드 규모화

○ 지역 기금, 민간 금융 협력으로 규모 확대

- 지자체 기금, 민간 투자자 매칭으로 지역의 사회투자 생태계 조성 및 자금공급 규모 확대, 인센티브 제공
- 사회투자 통한 자기자본 보강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분야별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 마련

나. 공익법인 사회투자 참여 지원

-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 공익법인이 정관에 투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투자/융자 등의 방식으로 주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 방안
 -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으로 인정 (수익용 자산가액의 1% 이상 지출 의무)
 - 지분 보유 한도 적용 제외 (5%)
 - 실행 방안
 -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 ☞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개정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25. 1. 23)
-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할 ‘공익위원회’ 설치



지정토론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토론문 – 도현명

발제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지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 성숙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몇 가지 핵심 제안에 대해 논의를 심화하고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구분

■ 해외 참고 사례: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와 '제9조(Article 9)' 펀드

-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금융상품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EU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며, 이 중 제9조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제6조 (Article 6):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투자 결정에 통합하지 않는 일반적인 펀드.
 - 제8조 (Article 8):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펀드 (Light Green). 투자 전략의 일부로 ESG를 고려하지만, 이것이 펀드의 핵심 목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 제9조 (Article 9): '지속가능한 투자'를 핵심 목표로 하는 펀드 (Dark Green). 바로 이 펀드가 '코드 9'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펀드는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습니다.
- 'SFDR 제9조'의 책임과 특징의 적용
 - **명확한 목표 설정**: 펀드 설정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투자'를 핵심 목표로 명시해야 합니다.
 -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 투자를 통해 하나의 환경/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엄격한 공시 의무**: 투자 목표 달성 과정과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임팩트를 측정하고,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 임팩트 펀드 유입자금의 확보 방안과 특성화

- 첫째, '수요자(임팩트 스타트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병행의 필요성입니다.
 - 발제문에서도 "양질의 수요 개발"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융 상품과 펀드가 만들어져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2기 활성화 정책은 "임팩트 규모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안된 정책 펀드 운용시 해당 운용조직에 수수료를 높이되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사업모델 고도화, 임팩트 측정 및 관리 (IMM)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 혹은 초창패/청창사/팁스 등의 임팩트 스타트업 전문 트랙을 구성해야 합니다.
- 둘째, 민간자본(연기금·보험사·재단 등)의 참여를 유인할 실질적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오늘은 재단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재단들은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을 조정하여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조직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임팩트 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벤처스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 대형 재단은 (a)주무부처에 맞지 않는 사업 주제인 것과 (b)임팩트펀드 출자가 주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로 출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임팩트펀드 출자를 주목적사업으로 인정한다면 출자가 독려될 것입니다.
 - 미국 등의 국가는 대형 재단들이 출연자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처리가 끝난 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공성을 창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 예. 미국: 5% 의무 지출 규정 (5% Payout Rule)
 - 미국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의무 지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규정: 매년 순 투자자산 공정시장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격 지출(Qualifying Distributions)'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목적: 세금 혜택을 받는 재단이 자산을 쌓아두는 것을 막고, 설립 목적인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 패널티: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됩니다.

○ 한국 현황

구분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자산	보통재산(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출연받은 수익용 자산의 가액(또는 그 소득)
의무 비율	은행 평균이자율 또는 실제 소득의 70% 중 큰 금액	자산가액의 1%(성실공익법인) 또는 소득의 70%(일반)
성격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	증여세 등 세금 혜택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3. 맺음말

오늘 논의는 사회적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로드맵과 같습니다. 임팩트 투자자로서, 또 임팩트 생태계의 오랜 구성원으로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단히 환영합니다. 나아가 '금융 접근성 제고'를 넘어 '임팩트 규모화'로, '자금 공급'을 넘어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동의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노력을 통해 국내 생태계가 스스로의 쓸모를 사회에 증명해내는 미래가 곧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윤석원 대표
에이아이웍스

소셜벤처 성장을 위한 투자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

에이아이웍스(구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시리즈 B 투자 단계를 넘어간 성장한 소셜벤처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장기적인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과 단기 재무성과에 대한 투자자 기대 사이의 간극입니다. 특히, 초기 임팩트 VC의 투자 회수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는 이를 흡수하거나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금융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팩트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이 절실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미션과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임팩트 VC들은 회수 시점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철저히 재무적 수익률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FI 위주의 세컨더리 자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수익성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소셜벤처는 적정 가치 평가를 받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션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 가치 창출이 입증된 후기 단계 소셜벤처의 지분을 매입하여 초기 투자자들의 원활한 엑시트를 지원하고,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과 사회적 미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팩트 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필요합니다. 이 펀드는 정부·모태펀드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고, 공익법인과 장기 투자 성향의 LP를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팩트 M&A 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소셜벤처의 성장은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오가닉 성장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보완적인 미션을 가진 다른 소셜벤처와의 전략적 M&A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셜벤처 생태계에는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전용 자금이 부족합니다. 임팩트 M&A 펀드는 재무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 실사와 통합 이후의 미션 동형성 유지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기반 사업(예: 돌봄, 재생에너지, 사회주택)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개별 기업이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팩트 자산운용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IPO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상장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팩트 자산운용사는 장기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아 초기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회적 부동산 및 대규모 사회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며, 배당 수익 모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배당률은 일반 기업보다 낮을 수 있지만, 사회 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제도와 연계하면, 장기 자본 유입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특례 상장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IPO 심사와 공시 체계는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주요 경쟁력으로 하는 소셜벤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ESG 특례 상장 제도는 재무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지표와 ESG 성과를 핵심 심사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미션 유지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특례 상장과 사회가치거래소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거래하는 사회가치거래소를 통해 상장 기업의 사회 가치가 **금융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단순한 재무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계는 소셜벤처의 상장 후 주가 안정성과 미션 지속성을 높이고, 사회 가치 창출이 곧 시장 가치로 환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컨더리 펀드-M&A 펀드-임팩트 자산운용사-ESG 특례 상장+사회가치거래소 연계**의 4+1축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소셜벤처들은 IPO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초기 투자자들의 회수와 사회 가치 창출의 선순환이 동시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정토론

강신천 벤처투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 소셜벤처 중요성

-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가치 기반의 사회성과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
-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 국내 소셜벤처는 '23년 2,679개사로, '1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시현*
→ 충분한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임팩트 투자 등 지원이 중요

* 소셜벤처 판별기업 수(개): ('19) 998 → ('20) 1,509 → ('21) 2,184 → ('22) 2,448 → ('23) 2,679

□ 소셜벤처 벤처투자 지원 현황

- 중기부는 소셜벤처 주무부처로서, 임팩트 투자·보증·융자, 소셜벤처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소셜벤처 성장을 지원
- 특히, '임팩트 펀드'는 '18년 신설 이후 모태펀드가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임팩트스퀘어 등 AC·VC에 2천억원을 출자하여 3천억원 이상을 조성하고, 233개 기업에 2,500억원을 투자
- 아울러, '24년부터 '라이콘 펀드'를 신설('24~'25년 420억원 조성)하여 로컬크리에이터 등 라이프사이클 분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중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펀드를 지속 조성하고,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등도 지원할 계획

자유토론

윤훈섭 제너럴 파트너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의견

윤훈섭 제너럴 파트너 /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 하반기 (2026년 1차 정기)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소셜임팩트' 분야 부활 의견

[신규 투자 자원 증대, 발굴]

- 기존 계정 중단으로 신규 투자자원 소진, 중개기관 자금수요 대응 부재
- 특히 사회적 가치 증대 중심 소셜벤처 신규 검토 및 현장 투자 중단 상태
- 잔여 투자재원도 팔로우업 예산 중심, 강화된 내부투자심의로 까다롭게 집행중
- 모태펀드 외 한국성장금융 KB사회투자펀드 사업중단, 한국산업은행 임팩트펀드 1회성 사업, 3대 정책펀드 재개 필요.
- 모태펀드 신규 CEO 취임사 3대 중점분야(딥테크, 글로벌, 지역)에서 '임팩트' 없음
- 모태펀드 재개시 스케일업 등 성장주기별 단계별 계정 필요
- 신탁 등 사회적경제금융기관 등 관련 신규 출자사업 필요, 현재 일반벤처투자 중심임.
- 은행 등 벤처투자촉진을 위한 자본규제관리 기준 RWA 특례완화시 소셜벤처 의무, 가산점제 등 인센티브 도입 요망

○ 정부가 주도하여 '소셜임팩트 세컨더리 펀드' 결성 의견

[회수 자원, 시스템 확충]

- 2018년 결성 1호 투자조합 2026년 만기 도래중, 가장 시급한 현안임
- 2026~2027년 IPO 가능 2~3개사(1호 기준, 주관사 선정) 성장 중. 만기 불일치
-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등 3대 기관 관련 세컨더리펀드 출자사업 필요
- 은행 등 벤처투자 RWA 특례완화시 관련 가산점 검토
- 기업 생애주기 매칭형 M&A 투자조합도 필요.

자유토론

한성근 대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자유토론

권오현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더 나은 디지털·AI 시대를 여는 디지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1. 배경: AI 시대, 사회적 가치 중심 접근의 필요성 증대

- 급속한 디지털 및 AI 전환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기술 인프라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 봉착
- 기술 혜택 보편적 확산을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새로운 접근 필수
-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넘어 다양한 주체 역할 요구,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디지털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 필요

2. 목표: 디지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전환

- 디지털 사회연대경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소유 운영하는 협동적 경제 구조 지향
- 지속가능성 지향: IPO나 M&A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플레이어 육성 중요

가. 디지털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역할

- 적정 디지털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규제, 노동자 소비자 소외, 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디지털 기술 적용
- 공익 지향 AI 생태계 조성: AI 개발 활용 검증 전 과정에 사회연대경제의 주도적 참여 유도, AI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돌봄 기후위기 등 공공 영역 AI 개발 보급, AI 부가가치의 사회 환원
- 기술 민주화 및 공공성 강화: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이용자 공동 소유 운영 모델 제시, 데이터와 AI 기술의 디지털 공공재화

나. 유형

- 데이터 신탁 및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 디지털 비영리 단체, 사회문제 해결 · ESG 솔루션
- 로컬 기반 소셜벤처, 소규모 협동조합
- 기존 기업의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자체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 협동조합

다. 현실적 과제 및 해결 방안

- 과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및 인프라 부족
- 해결 방안:
 - 공동 인프라 구축
 - 전문 인력 육성 및 매칭
 - AI 윤리 및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정부의 '공익 디지털·AI 프로젝트' 집중 지원

3. 다양한 유형의 플레이어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중심)

가. 초기 육성

- 대상: 소규모 조직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 목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 모델 검증
- 핵심 전략:
 - 지역 및 현안별 사회문제해결형 매칭 사업 확대
 - 사회연대경제 기관들에 대한 적정 디지털·AI 전환 지원. 전문 솔루션 기관 동시 육성
 -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 능력을 향상하는 정의로운 디지털·AI 전환 지원
 - 전문 육성 기관 연계. 수입의 일부를 출자하는 상호 기금 조성

나. 성장 및 확장

- 대상: 검증된 모델을 가진 조직 (플랫폼 협동조합, 데이터 신탁 등)
- 목표: 사업 확장 및 영향력 증대
- 핵심 전략:
 -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성장을 위한 출자/지원금/투자금/제도 경로 마련
 - 디지털 사회연대경제 전용 펀드 조성
 - 사회문제해결형 R&D 강화. 팁스(TIPS)와 유사한 방안 마련
 - 바우처 및 매칭형 지원금 조성
 - SPC(특수목적법인)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 및 성장 도모

다. 성숙과 지속

- 대상: 사회연대경제 조직
- 목표: 정체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핵심 전략 (공동체 중심의 대안적 회수(Exit) 전략 모색)
 - 커뮤니티 투자 활성화: 조합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자본 확충 및 소유 구조 분산
 - 기관 차입 및 재단 투자: 미선에 공감하는 금융기관, 재단의 투자 및 거버넌스 참여
 - 공공기관화: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해진 조직의 전환

4. 결론

- 디지털 및 AI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더 나은 방향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가치 중심의 디지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은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는데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단선화된 인프라/빅테크 중심의 디지털 경제 성장 전략을 넘어서는 “디지털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회연대경제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확장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연대경제 플레이어가 활동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MEMO

MEMO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최혁진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포럼, 소셜벤처코리아